文, 박영선·김연철 장관임명 강행… 野 "인사폭거" 반발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인사 청문보고 채택합의 못한채
장관 후보자 5인에 임명장 수여
야권 "장관임명 철회·경질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5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 후보자와 김 장관 후보자는 당초 국회에서 임명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임명 재가했다. 두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의 장관은 이미 업무를 개시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장 수여식 때 "중소벤처부 승격으로 장관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박 장관을 격려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소벤처정책은 다른 부처와 함께 풀어가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과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눈여겨볼 점은 문 대통령이 두 장관에 대한 임명 재가가 야권의 반발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실제 두 장관은 국회 인사검증 때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자녀 증여세법 위반 의혹을, 김 장관은 극단적인 이념 편향으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즉 두 장관에 대한 임명 재가는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두 장관 임명강행은 그동안 진행된 임명강행 중 11번째에 해당된다. 문 대통령은 두 장관 이외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명주 환경부 장관·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양승동 KBS 사장 등을 임명강행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두 장관 임명을 공식 재가했다. 인사참사는 역대급 '인사폭거'로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두 장관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또) 인사참사 유발자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을 서둘러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은 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박 장관과 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는 11번째 임명강행"이라며 "전 정권은 집권 당시 9번의 임명강행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만에 전 정권에서 행한 임명강행 수를 넘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대강 입장을 고수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때 "박 장관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적 흠집내기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임명권 훼손에 몰두할 시간에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즉 문 대통령의 두 장관 임명강행으로 인해 여야 대립이 심해졌고, 이는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실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8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합의를 하지 못했다. 여야가 장관 임명강행을 시작해 쟁점법안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상생·공존으로 자발적 협력문화 만들 것"

박영선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생협력, 경제구조 바꾸는 첫 걸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 이후 열린 환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취임하면서 '상생과 공존'을 중심에 두고 중기부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 제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신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3만 달러의 문턱을 넘어 4만, 5만 달러의 튼튼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상생협력'을 중기부의 중점 추진정책 1순위로 꼽았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구축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기술탈취 근절·불공정거래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관급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돼 조직 피로도가 심하고,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기부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명실상부한 상징 부처로서 그에 걸맞은 위상을 확립하겠다"면서 "증가하는 정책영역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실·국장들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정책을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국장 책임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벤처인들이 서로 모여 소통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각각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만나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은 중기부가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 지원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중소기업 복지 힐링센터 구축 등도 힘쓰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김학의 출국금지' 놓고 진실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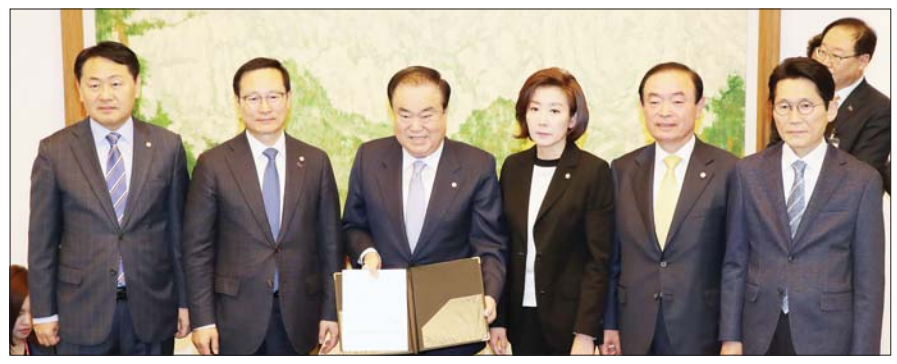
과거사위, 대검에 정면 반박
갈등 수사에 발목 잡을수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검찰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이 진실공방을벌이고 있다. 과거사위원회의 출국금지 요청을 대검찰청이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검이 정식으로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과거사위와 대검의 '팩트체크' 갈등이 자칫 수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용민 위원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단이 위원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의 권고 형식으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하지만 대검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조사단 명의공문 형식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과거사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을 대검이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조사단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가 철회했다"라고 해명한바 있다.

이날 사실상 과거사위의 기자화견은 '조사단이 출금요청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대검의 반대로 다른 형식을 찾게 된 것'이라는 것으로 '조사단이 출금요청을 철회한 것'이라는 대검의 해명을 재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8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탄력근로제 확대 등 계류법안 통과될까

5당 원내대표 초월회서 협치 나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8일 초월회 모임을 갖고 쟁점 현안 협치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했지만,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을진 미지수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수립을 언급하며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현재 계류 중인 1만3000여개 법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앞서 3월 국회에서 145건의 법안을 가결했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교육·국방·의료 부분 비쟁점 현안이었다. 4월 국회에서 논의할 주요 경제법안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서비스발전법, 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의 경우 주52시간 추가계도 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면서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처리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쟁점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나 원내대표의 경우 계류 법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을 거론하며 "이번 추경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등 총선을 위한 선심용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정부가 추경을 재해와 비재해로 분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각 당마다 이해관계와 조건이 상충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 대비 정국에 돌입한 것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특히 홍 원내대표가 남은 임기 안에 각종 입법안을 야당과 협상해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야당은 현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합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수처 법안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분열음이 나왔던 바른미래당의 경우 4·3 보궐선거 참패 후 내홍이 극심해진 모양새다. 바미당은 이날 회동에 앞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지만, 지도부 7명 중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제외한 5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부 수습이 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지난 5일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